

[朝鮮林政計劃](1926)의 性格에 관한 研究

- 朝鮮林政計劃書중 要存國有林 關聯計劃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hoson Forest Policy Plan(1926)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Indispensable National Forest in Choson Forest Policy Plan -

배재수* · 윤여창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

1. 연구목적

흔히들 일제의 식민지 임업정책을 논하면서 1926년에 만들어진 조선임정계획이 과거 한국의 임정과 구분되는 개혁적인 측면이 존재하며, 나아가 1910년 일제에 의한 강제적인 합병 이후 1926년에 이르는 기간과도 뚜렷히 구분되는 개혁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 뚜렷한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으로 1)과거 조선총독부 영림청, 본부기관내의 산림파출장소, 도관할산림으로 분산된 국유림관리기관을 영림서로 통일했다는 측면과 2)과거 임정의 관심대상이 되지 못했던 민유림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측면을 들고 있다.

과연 <朝鮮林政計劃>은 진정한 개혁(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인가? 조선임정계획이 진정한 개혁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유림관리기구의 통폐합이나 민유림정책의 수립보다는 더욱 근본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기준으로 1)국유림경영에 합당한 보속적인 산림경영을 추구하였는가 2)이 정책으로 인해 한국민의 '삶의 질'이 증진되었는가라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번째 기준은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목적으로 국유림 관리기관을 통합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율이라는 측면이 한국 산림의 보속적 생산력을 파괴할 정도의 산림수탈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개혁일 수 없다. 또한 국유림의 보속적인 생산을 저해할 정도의 산림파괴는 현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아도, '요존국유림의 보속적 산림경영을 추구하였는가' 하는 것이 평가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유림경영의 원칙적인 목표인 보속적인 산림경영을 추구하였는가라는 평가기준에 맞추어 조선임정계획의 수립배경 및 그 속에 담고 있는 주요 항목들의 계획과 실적을 비교·평가하여 이 계획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1926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작성된 <朝鮮林政計劃書>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 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각 항목에 제시된 통계자료들은 <朝鮮總督府統計年報> 및 <朝鮮의 林業> 각년판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대상시기라는 측면에서 조선임정계획서가 만들어지는 1926년부터 중

일전쟁이 발발하여 전시경제에 편입되기 직전인 1936년까지 한정하였다. 1937년 이후는 전시경제에 편입되어 배급경제·통제경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산림정책이 진행되기 때문에 前時期와 확연히 구분된다. 또한 분석대상은 국유림을 중심으로 하며, 이는 일제의 식민지 산림정책의 핵심인 '일본인에 의한 한국 산림의 이권획득'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3. 결과 및 고찰

조선임정계획이 수립된 1926년부터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6년까지의 시기는 앞선 시기 이루어진 한국 산림자원의 파악과 산림소유구조의 법적 확인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1)제1차 세계대전 이후 목재수요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2)목재수입국으로 전략한 일본의 목재공급지로서의 기능을 위해 3)조선총독부영림청, 산림과출장소, 도관할산림으로 분산되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국유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1924년 제1차대전 후 방만한 일본의 재정관리와 1923년 관동대지진 복구를 위해 행해진 行政整理에 따라 오랫동안 이어 온 大小林區署를 營林局署로 축소·통폐합한 것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한국의 산림조직의 개편이었다. 이러한 산림조직의 개편이 진정한 개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시 한국민중의 요구를 반영하고 국유림경영의 근원적 목적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내용적 측면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조선임정계획의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되는 1)국유림관리기관의 통일 2)대량벌채 3)천연갱신 중심의 조림정책은 한국민중의 부를 증진시키거나 한국산림의 보속적 산림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림자원조성 보다는 일제의 식민지 초과이윤을 획득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이 기간의 사업계획과 실행실적을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제시대라는 특수한 시기는 한국의 국유림이 자국민의 물질·질적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관리·경영되기 보다는 제국주의의 초과이윤달성을 위해 기능하게 된다는 왜곡된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1) 사업안의 목적이 한국산림의 보속적 경영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산림의 법정상태로의 유도를 배제하고 수확의 보속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것 2)벌채량의 변화가 제1차 세계대전의 목재수요의 급증과 일본의 목재수입국으로의 전략, 일제의 對滿洲 침략정책에 의해 변화해 나간다는 것 3) 값싼 천연갱신정책이 채택되었다는 것 4)국유림관리기관이 일제의 초과이윤달성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과거 조선총독부 영림청소관의 산림과 강원도의 산림만으로 축소되고 남한의 산림은 국유림으로서 관리가 포기되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선임정계획은 국유림관리기구가 분산되어 국유림정책의 수직적 통합을 이루어 내지 못했던 것을 영림서라는 단일기구로 통합함으로써 朝鮮總督의 권한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목재수요의 급증과 목재수입국으로 전략한 일본 임업의 위기를 제국주의적 영토확장(만주침략)과 식민지 한국의 산림자원의 수탈을 통해 제국주의적 초과이윤에서 달성하고자 하였던 일제의 의도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정책제안이었다.